



3월 5일(월) 16:30(회의종료) 이후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

부장 이진원, 사무관 송강일
(02-2100-2032, 2041)

평창 동계패럴림픽, 올림픽 보다 안전한 대회로 만들겠습니다.

-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비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, 테러대비태세 강화 -

□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(센터장 문영기)는 3월 5일(월)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정원, 경찰청, 소방청, 패럴림픽 조직위 등 16개 관계기관 위원들(국장급)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

* 참석 : 국가정보원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경찰청, 소방청, 질병관리본부, 원자력안전위원회, 식품의약품안전처, 산림청, 강원도, 합동참모본부, 전기안전공사, 가스안전공사, 조직위 국장급

□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한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,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각 기관별 임무 분담 및 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.

※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림픽보다 더 안전한 패럴림픽을 위해 대테러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(2.26, 국무총리실 간부회의)

○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「대테러안전본부」(대테러센터·국정원 공동)와 관계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올림픽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IOC와 해외언론 등이 '완벽하게 안전한 올림픽'이라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.

- 정부는 평창올림픽 때와 동일하게 「대테러안전본부」를 중심으로 평창 현지 「종합상황실」을 운영하고 전 경기장·선수촌에 「현장안전 통제실」을 가동할 계획이며,
 - G-3인 3월 6일(화)부터 서울·인천·경기·강원 지역의 테러경보를 '주의'에서 '경계'로 상향조정하여 대테러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.
 - * 전국은 패럴림픽이 마무리되는 3.20(화)까지 '주의' 단계 유지
- 아울러, 평창올림픽에서 호평을 받은 △드론 탐지 레이더 및 전파 차단, △테러위험인물 지문검색, △얼굴인식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패럴림픽에도 투입하여 테러대비태세를 강화하고,
 - △AD카드 위·변조 및 무단 도용 △일부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실탄 반입, △위험물 반입 기도 등 올림픽 시 발생한 사건·사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 - 특히, 패럴림픽이 장애인 스포츠 행사인 점을 감안하여,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 인력을 올림픽보다 상대적으로 증원*하는 등 더 안전하고 성공적인 패럴림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
 - * 올림픽의 경우 선수 6명당 1명의 소방인력 배치, 패럴림픽의 경우 선수 2.3명당 1명을 배치할 예정